

월요광장

국학(國學)을 바로 세우는 의병



이승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논란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새 국사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학교가 선택한 국사 교과서를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가 반대하여 해당 학교가 다른 교과서로 정하는 등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오는 6월 말까지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내겠다고 했다. 정부는 ‘균형 잡힌 역사인식’과 ‘사실에 기초한 기술’이라는 두 가지 큰 원칙으로 개선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인턴은 전했다. 이와 함께 교과서 감수 강화, 편수조직 개편, 검증 참여 전문가 확대, 검증기간 장기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국정 교과서’ 발행이라는 옛 방

식으로 돌아가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편수조직 강화 등을 보면 ‘국정 교과서’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시해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진정으로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민족혼이 있는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한다는 발표를 했을 때 이를 환영한 우리일차기 국민운동본부도 이 점을 분명하게 요구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과 문화가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역사의식의 부재로 인해 국학(國學)의 중요성을 모른다. 국학이 확립되지 못하고, 국학을 2세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국학을 이야기하면 국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국학은 각 나라의 고유한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말한다.

역사 저술로 인기를 끌고 강연자로도 바쁘다는 한 저자의 신문 인터뷰 기사를 얼마 전에 보고 적지 않게 놀랐다.

그는 “우리 국사 교과서는 문자 기록도 없는 단군 이야기부터 나온다”며 “기록이 나

오는 한사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역사가 한사군부터 시작되는가. 이전에 우리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누구의 잘못된가.

우리나라는 전란을 많이 겪으면서 각종 사서가 불타고 약탈당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연구하면서 외국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록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쓴다.

북방 유목민족이 왜 흉노(匈奴)인가. 흉노가 무슨 뜻인가? ‘오랑캐 종’이러니, 자신의 민족을 이렇게 부르는 민족도 있는가. 모든 민족을 흡수한 중국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 역사를 제 입맛에 맞게 송두리째 다시 썼다. 이런 자료는 그들의 입장에서 본 한국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 교정하여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국학이다. 국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독립, 문화와 역사, 정신의 독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까?

국학은 우리 역사를 우리 눈으로 제대로 보고 알자는 데 목적을 둔다. 배타적이고 국수주의로 가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학은 평화적이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철학

을 담고 있는 천지인 사상과 흥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국학교육을 충남 천안 국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학원에서는 한민족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민족혼 교육을 통해 자긍심과 자부심, 민족애와 애국심을 깨운다. 지난해에는 부설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올바른 국가관 정립과 이를 교육하기 위한 ‘나라사랑국민교육원’ 건립을 시작했다.

나라사랑국민교육원은 내가 누구인지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일을 깨워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큰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국학원을 방문한 외국인 학자들은 왜 이런 일을 인간이 하는지 의아해 한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터인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그래서 필자라도 해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학원에서는 모두 국학을 세우는 의병(義兵)의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이런 국학원 활동을 전국 곳곳에서 후원한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도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국학 알리기와 나라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법조칼럼

사건 해결에도 가끔 운이 필요하다



한지혁
광주지검 형사3부 검사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직접 증거라고는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유서,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SNS 메시지, 경찰에서의 진술뿐이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유서 내용에 반박하고, 경찰진술을 교묘히 변명할 경우 반박 논거가 전혀 없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처음 이 사건이 필자에게 배당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짧은 시간 고민을 많이 했다. ‘어떻게 재백을 받지?’, ‘만약 피의자가 부인하고 반박할 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 처분을 해야 하나?’ 등의 수많은 경우의 수가 뇌리에 스쳐 지나갔다. 당시 필자가 피의자를 최초로 마주하고 깨낸 카드는 피의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피의자 역시 피해자의 자살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피의자의 감성에 호소하자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모델로 데리고 간 시간, 모델 안에서 있었던 성폭행의 기억 등에 관한 진술을 의외로 손쉽게 받아낼 수 있었다.

피의자는 검찰 1차 조사 이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피의사실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하였으나, 1차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다 보니 유죄가 선고됨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도 가끔 드는 생각이지만, 피의자의 사

건이 처음 송치되어 왔을 때 피의자가 독한 마음을 먹고 필자에게 “피해자를 만나기는 했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는 하였지만 합의 하에 하였다”고 변명하였다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아찔하기까지 하다.

또 다른 사건은 초입 때 배당된 강간사건이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공판을 끝내고 수사라는 것이 대충 무엇인지 감이 올 즈음에 수사감사실로 복귀하면서 받은 재판당 사건이었는데, 사해업자인 50대 피의자가 채무를 오랜 기간 연체하였던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사건이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친구의 진술 등 정황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지만, 피의자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필자는 당시 고소인과 피의자를 따로 불러 그들의 주장요지를 자세히 들어보았고, 그 진술을 청취하던 중 고소인의 진술에서 정황상 모순이 느껴졌다. 그러나 고소인 역시 일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때 갑자기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이 피의자의 새로운 진술이었는데,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발기에 문제가 있어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당시 피의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이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발기가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은 이상 위증거가 곧바로 ‘피의자가 강간을 할 수 없음’을 입증할 증거로 될 수는 없는 까닭에 정황증거로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위 진단서를 숨겨둔 채 피의자와 고소인의 대질조사를 진행하였고, 고소인의 진술들이 하나하나 깨질 무렵인 조사 막바지에 이르러 위 진단서를 제시하며 피의자는 “사건 당시 발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를 외칠 생각이었다. 그러나 진단서를 제시하면서 말이 꼬이는 바람에 “피의자는 사건 당시 발기 불능이었던 것입니다!”라고 말해버렸다. 갑자기 ‘발기 불능’이 되어버린 피의자의 당혹스런 표정과 함께 필자는 용어에 실수가 있음을 알아채고 다시 수습을 하려고 하는 순간 고소인이 입을 떼기 시작했다.

“사실 강간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 순간 검사실은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 작막했고, 필자 역시 갑자기 역전된 상황에 어리둥절해 있었다. 사건은 당시 초입이었던 필자의 황당할 실수로 고소인의 극적 재백을 이끌어내며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히고, 고소인을 무고로 인지하여 구속하고 종결되었다.

위 두 사례는 일상적인 사건 처리 속에서 있을까 말까 한 행운이 겹쳐져 운 좋게 혐의 유무를 밝힐 수 있었던 사례들이다. 하지만 필자 역시 명심하고 있다. 운이라는 것은 노력과 사건에 대한 의지 없이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고

기업과 취업희망자의 기대, 일·학습병행제로 해결하자



김재복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제도다. ‘일학습 병행제’는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학습근로자)로 채용해 자체 기업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장기간(최소 6개월~최대 4년 이내)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교육훈련을 마친 학습근로자의 역량을 국가 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해 자격·학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청년 등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교비유를 해소하고 기업의 인력·숙련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필요한 인재를 직접 육성·채용하고자 하는 기술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잘 가르치고 학습근로자가 잘 배울 수 있도록 기업 주도의 교육훈련을 위해 기업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일학습 프로그램 개발비(900만원), 현장훈련 교재 제작비(300만원), 전담인력 행정수당(300만원), 전담인력 양성교육비(100만원)등을 매년 기업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은 인건비 지원 차원에서 근로자 당 월 40만원과 훈련비(현장의 훈련 및 현장훈련을 포함한 훈련비의 최대 300%), 자격취득 등 기업주도의 채용 확정형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일학습 병행제’는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1단계 기업에 정착시킬 계획이며, 우선 1차 참여자를 올해 1월31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모집하고 있다. 선정분야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기준에 의한 문화콘텐츠, 건설, 기계(금형), 재료, 화학, 전기·전자(반도체), 정보통신(SW) 등 7개 분야로서 NCS가 이미 개발된 분야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대상기업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술기업이나, 50인 미만 기업이라도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

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은 선정 대상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단독기업형 또는 공동훈련센터형의 2개 유형 중 1개를 선택하여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도입하는 ‘일학습 병행제’는 직업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을 학교에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며 산업 현장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창조적으로 선도하고자 ‘근로자와 일터의 능력을 높여주는 인적자원 개발 중심기관’이라는 비전을 통해 국민중심의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 올 현재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기관으로서 ‘국민행복서포터즈’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좋은 인제가 없어 고민하는 기업체 사장님, 마땅히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취업희망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社說

빈틈없는 방역으로 AI 재앙 조기에 막아야

전북 고창의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1형)가 발생한 데 이어 부안의 오리 농장에서도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인접지역인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전남은 도내 축산 관련 차량이 최근 AI가 발생한 고창 농장을 드나든데다 AI의 요인으로 지목된 철새의 이동 경로가 서해안을 따라 전남→전남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정부가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남·북과 광주광역시외의 가금류, 축산 관계자, 출입차량에 대해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동한 것도 이런 이유다.

전남지역에선 지난 2003년 이후 AI가 4차례나 발생하면서 닭·오리 사육농가들이 평소보다 AI를 경계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월, 전북 익산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AI는 당국이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기 전국으로 확산됐고, 전남에서만 3개월 동안 32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는 피해를 당했다.

전남은 전국 오리 사육량의 절반에 가까운 48%, 닭 사육량의 12.4%를 차지하는 최대 사육지로서 AI가 확산될 경우 사육농가의 초토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 지자체가 방역 및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전례에 비추어 우려를 떨치지 못하는 어렵다. 예방과 방역에 실기(失機)하는 등 AI를 원천 차단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AI 확산 차단은 빈틈없는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국은 AI 방역 망을 엄격히 매뉴얼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가동해 재앙을 막아야 한다. 또한 닭·오리고기를 잘 익혀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알려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관 해치는 불법현수막 이대로 놔둘 건가

최근 광주지역에 불법 현수막이 된을 치고 있다. 대로변은 물론이고 뒷골목까지 분야·대출광고 등이 어지럽게 내걸려 있다. 그런데도 광주시와 각 구청은 철거는커녕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현수막 재활용업체가 몰랑 폭주로 반입금지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수막 재활용업체인 H업체는 지난 9일 현수막 반입을 담당할 공무원이 시와 각 구청이 대분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와 구청에 보냈다고 한다. 지난해 9월부터 몰랑이 평소보다 3배 넘게 쏟아져 적재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H업체는 반입한 현수막을 이용해 어촌 양식용 로프와 산업용 포장로프·장마구니·마대·건설용 안전로프 등을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각 구는 당분간 불법 현수막 단속과 철거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더라도 공터 또는 창고, 단속 화물차 적재함에 쌓아놓는 것 이외엔 달리 처

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하계U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 세계 속의 국제도시로의 비상을 꿈꾸는 광주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미지를 망치는 불법 현수막을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즉각 대안을 모색해 도시 미관이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손을 써야 하나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처리가 난감하다 하여 시와 각 구청이 대책 없이 철거와 단속을 중단한다면 광주가 삼류도시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대로 놓고 수존논은 국제도시로의 지향을 말할 수 있겠는가.

시와 각 구청은 불법 현수막을 공해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은 타지역 업체도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다각적인 현수막 재활용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제에 불법 현수막을 포함한 도시 미관대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세간에선 삼성가(家)의 승계 문제를 흔히 태종의 왕위 계승과 비교하곤 한다. 태종이 양녕대군과 효령대군 대신 셋째인 충녕대군(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처럼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맹희와 창희씨를 두고 3남인 건희씨를 후계자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비운의 황태자’로 불리는 이병희씨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삼성의 부총수로 불릴 정도로 그룹 승계 1순위였다. 한때는 삼성전자 부사장 등 직함만 17개에 달할 정도로 신임을 얻었다. 문제는

선친이 1966년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부터 시작했다. 그는 1971년 경영 대권을 맡은 지 6개월만에 선친의 눈밖에 나면서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했다.

이병철 회장은 자서전에서 “병희는 주위의 권고와 본인 희망대로 그룹 경영을 맡겨됐지만 6개월도 못가 맡겼던 기업은 물론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고 회고했다. 반면 맹희씨는 “삼성에 서 일한기간은 7년이고, 물러난 것은 기업이 혼란에 빠져서가 아니라 몇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다”고 밝혀 입장차를 보였다. 이병희씨는 1987년 12월 1일 그룹의 경영권이 동생 이건희 회장에게 넘어가자 “아버지와와의 사이에 상당한 틈새가 있었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삼성의 대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며 당시의 충격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삼성가의 상속재산 소송이 2심 결심공판을 끝내고, 다음달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삼성가 소송은 이병희씨 측이 선친이 남긴 차명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후 2년여를 끌었다.

얼마 전에는 법원이 선친이 1966년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부터 시작했다. 그는 1971년 경영 대권을 맡은 지 6개월만에 선친의 눈밖에 나면서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했다.

이병철 회장은 자서전에서 “병희는 주위의 권고와 본인 희망대로 그룹 경영을 맡겨됐지만 6개월도 못가 맡겼던 기업은 물론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고 회고했다. 반면 맹희씨는 “삼성에 서 일한기간은 7년이고, 물러난 것은 기업이 혼란에 빠져서가 아니라 몇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윤석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 1부 2200-661	경영지원본부 2200-515 (F A X 222-8005)	문화 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 2부 2200-651	광고매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2	여론매체부 2200-621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